

WEEKLY CLIMATE REPORT

탄소중립&기후변화 국제동향



4월 첫째 주 주요 동향

- 01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 (4.1.)
- 02 (세계) UN, 그린워싱 위치독 발족 (3.31.)
- 03 (세계) UN 생물다양성협약 협상 실패 (3.29.)
- 04 (미국) 일련의 기후정책 제안 (4.1.)
- 05 (미국) 5.8조 달러 예산안 내 기후·에너지 예산 증액 (3.28.)
- 06 (캐나다) 석유·가스 부문 42% 감축 목표 발표 (3.30.)
- 07 (세계) 미국의 GCF 재정 공여 없이는 예산 감축 불가피 (3.29.)

01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¹⁾ (4.1.)

-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1억 8,000만 배럴(세계 수요의 이틀분)의 비축유 방출 지시
 - 취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 공공 토지·수역에 대한 시추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는 매우 상반적인 조치로 평가
 -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비축유 방출은 행정부의 기후목표 포기가 아닌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함이라고 밝혔고, 석유회사들에 원유 증산 지시 및 연방정부의 시추권을 보유한 채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기업들에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제안
 - 일부 전문가들은 본 조치가 11월 중간선거 패배 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승인 어려움 등 목표 달성 실패와 경제 불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 현실이라 분석

02 (세계) UN, 그린워싱 위치독 발족²⁾ (3.31.)

- UN, 탄소상쇄 및 탄소 제거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도시, 지방정부, 기업의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넷 제로’ 공약 측정과 분석을 위한 보편적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고위급 전문가그룹(HLEG)^{*} 발족

* 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Net-Zero Emissions Commitments of Non State Entities

- 남녀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각 8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HLEG는 1년 이내 넷제로 공약을 평가하고 이를 국내외 규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 발표 예정
-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주요국의 2050 넷제로는 물론, 기업, 투자자, 도시, 주 및 지역 사회의 넷제로 약속 이행 또한 시급함을 밝히며 위원회의 발족 배경을 밝힘
- HLEG의 초대 의장으로 캐서린 맥케나(Catherine McKenna) 前 캐나다 환경장관이 임명 되었으며 위원 중 한명인 기후학자 빌 헤어(Bill Hare)는 현재 넷제로 공약 달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어, 비정부관계자들의 가이드라인 없는 넷제로 선언은 단순 홍보 캠페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HLEG는 탄소상쇄와 탄소제거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의 그린워싱 및 비정상적인 베이스라인 설정 판별에 초점을 둘 것이라 밝힘

03 (세계) UN 생물다양성협약 협상 실패³⁾ (3.29.)

- 195개 UN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포함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1) Bloomberg, Biden embraces oil as Ukraine war overwhelms his climate agenda (4.1)

2) Climate Home News, Canadian ex-minister Catherine McKenna named to head UN greenwash watchdog (3.31)

3) New Scientist, UN biodiversity talks fail to agree on new targets to protect wildlife (3.29)

GBF)' 초안 마련을 위한 2주간의 협상 타결 실패

- 일부 협상 참여자들은 비록 GBF의 초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0년까지 전 세계 토지·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몇몇 핵심 요소를 제외한 초안이 마무리되었음을 긍정 평가
- 일부에서는 각국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해 Post-2020 GBF 합의가 2년이나 지연되었으며, 초안에서 저소득 국가들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 100억 달러 재원 조달에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600억 달러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브라질과 인도는 매년 7,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
- 세계자연기금(WWF)은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 보호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BD COP15 2차 회의 전 6월에 열릴 나이로비 회담에서 각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의 참여 촉구

04

(미국) 일련의 기후정책 제안⁴⁾⁵⁾⁶⁾⁷⁾ (4.1.)

- '더 나은 재건법'의 상원 계류, 비축유 방출, 여론조사 중간선거 패배 전망 등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각 부처별 기후 규제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 중
- 교통부(DOT)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트럼프 대통령이 낮춘 연비 규정 재강화
 - '26년 생산 승용차·소형트럭 연비 21Km/L로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17Km/L 대비 상향, '24년식과 '25년식은 연간 8%씩, '26년식은 10%의 연료 효율 향상으로 '50년까지 2,340억 갤런의 연료 절약 및 약 25억tCO₂e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달성 목표
 - EPA는 작년 12월에 상향한 '26년 모델 연비 22Km/L 달성을 통해 '23년 모델부터 '26년까지 운송부문 배출가스 28.3% 감축 계획
- ※ EPA는 배출가스 기준, DOT는 연비 규제 담당
- EPA, '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 '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폐기된 청정대기법 책임 회피(Clean Air Act liability protections)* 폐지 재제안, 45일간의 공개 논평 후 채택될 예정
 - * 청정대기법의 배출한도 위반을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긴급적극적 방어(emergency affirmative defense) 선택권. 적극적방어를 통해 발전소 및 산업 분야에서

4) The Hill, Biden Administration boosts mileage standards slashed by Trump (4.1)

5) The Hill, EPA revives Obama-era rule removing emergency liability protection for polluters (4.1)

6) E&E News, GSA to impose first national carbon standard for concrete (3.30)

7) Washington Post,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funding to make homes energy-efficient (3.30)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재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행위’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할 때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

-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연방 조달 계약 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탄소배출 기준 도입
 - GSA는 연간 75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조달 계약을 감독하고 있으며 조달 프로젝트 계약자에게 건축 자재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 에너지부(DOE),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법에서 건물 단열화(weatherization)와 가전제품 교체를 위해 할당된 32억 달러 투자 예정
 - 현재 연간 약 38,0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비 예산 10배 증액으로 45만 가구 지원 예정

05

(미국) 5.8조 달러 예산안 내 기후·에너지 예산 증액⁸⁾ (3.28.)

- 바이든 대통령은 5.8조 달러 규모의 '23년 예산안을 공개, 주목할만한 환경·에너지 정책 이니셔티브 없이 기후변화 관련 부처 예산 증액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외 재정적 책임, 안전과 안보를 중시하며 공정한 성장을 지속하고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강조’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힘
 - 현재 상원 계류 중인 ‘더 나은 재건법’에 대한 예산은 처리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본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후변화 부문은 재생에너지 연구,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환경 분야 지출, 기후복원 자금 증대, NDC 달성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등을 위해 각 부처에 '21년 대비 167억 달러 늘어난 총 449억 달러 배정
 - 아직 '22년 회계연도 지출 계산서(FY2022 Omnibus Spending Bill) 통과 이전이지만 전년도 예산 요청액과 실제 할당액 추이를 볼 때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큼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 증세(재산 1억 달러 이상의 가구 최소 20%의 소득세 부과), 법인세 21%→28% 상향, 화석연료 보조금 감면 혜택 폐지를 통해 추가 세수 확보 및 적자를 줄일 계획이지만 올해에도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본 예산안은 의회로 넘어가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

8) E&E News, Inside Biden's \$5.8T budget: More for climate, clean energy (3.28)

06

(캐나다) 석유·가스 부문 42% 감축 목표 발표⁹⁾ (3.30.)

- 캐나다, 지난해 승인한 ‘넷제로책임법(Net-zero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NDC인 '05년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91억 달러(CAD) 지출 계획을 포함한 감축 계획 (Canada's 2030 Emission Reduction Plan) 발표
 - 본 계획은 캐나다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배출량 상한선이 포함되지 않는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이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
 - ※ 캐나다는 세계 4위 석유 생산국이며, 10위 온실가스 배출국
 - 또한, '26년까지 '05년 대비 20% 감축 목표를 세워 중간 평가를 진행할 계획
- 본 계획은 지난 20년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석유·가스 부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19년 대비 42% 감축 목표('05년 대비 31%)를 제시해 타 분야 감축이 더 필요할 것
 -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Petroleum Producers)는 성명을 통해 석유·가스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며 러시아산 화석연료 대체 수출원으로 LNG를 공급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를 할 것이라 발표
 - 석유·가스 생산 과정에서 메탄 감축 75% 달성 및 탈탄소화를 위한 청정기술에 투자 계획
 - 국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인 26%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산업 배출량 감축을 위해 CCS 보조금 도입 예정
- 캐나다의 탄소중립은 매우 비용 소모적일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의 분석에 따르면 '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민간에서 2조 달러가 필요하며, 현재 기술 수준 고려 시 연간 600억 달러의 투자 필요

07

(세계) 미국의 GCF 재정 공여 없이는 예산 감축 불가피¹⁰⁾ (3.29.)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야닉 그레마렉(Yannick Glemarec), 선진국의 추가 재정 지원 없이는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
 - * GCF는 '10년 UN 기후변화총회를 통해 설립, '20년까지 1,000억 달러 기후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나 출범 이후 약 100억 달러를 웃도는 자원 조성(EU 91억, 일본 30억, 미국 10억 달러 등)에 그침
 - 미국은 '14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3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임기 만료 전까지 10억 달러 지원에 그쳤고, 후임 트럼프 대통령은 GCF에 대한 지원을 멈췄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9) Bloomberg, Trudeau climate plan seeks 42% cut in oil and gas emission (3.30)

10) Climate Home News, After US fails to pay its debt, UN's flagship climate fund warns of austerity (3.29)

-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GCF 지원을 위해 의회에 예산 12.5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10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2023 회계연도 예산에 GCF 지원 16억 달러를 요청
- 환경운동가들은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중단 시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미국은 세계 기후 협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백악관에 EU 지원금 91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인 80억 달러 예산 배정 촉구